

# 디지털시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온라인상 혐오 양상에 관한 연구\*

조숙정 · 조일윤\*\*  
(동아대학교)

1. 서론
2.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 2.1. 혐오표현의 개념
  - 2.2.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양상
  - 2.3. 선행연구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4. 분석결과
  - 4.1. 일반적 특징
  - 4.2. 키워드에 의한 내용분석
  - 4.3. 분석결과
5.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3093301).

\*\* 제1저자 : 조숙정, 교신저자 : 조일윤

## ■ 국문초록

### 1. 서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리함 이면에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역기능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국내 디지털 역기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 수준이 현재 6.8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향후 심각성이 5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1)</sup> 또한 디지털 역기능에 AI(50%)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AI 기술이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보다 정교한 수준의 허위정보 생산과 편향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이새봄 2023: 63).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조지아공과대, 워싱턴대는 공동연구를 통

---

1) '디지털 시대'의 그늘, 디지털 역기능을 막아라 - 기술과혁신 웹진 koita.or.kr (검색일: 2023.9.2)

해 AI 모델 중 하나인 CLIP을 바탕으로 설계된 로봇이 인간의 얼굴을 보고 이 중 범죄자를 구분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백인 남성보다 흑인 남성을 범죄자로 분류할 확률이 10%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정주부를 구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백인 남성보다는 유색인종 여성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AI가 인터넷상의 방대한 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나 편견, 잘못된 정보까지 습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주요 원인이다.<sup>2)</sup>

앞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불러일으키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남녀, 연령, 지역 및 소득 계층 간의 편견과 혐오가 널리 퍼져있고,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인종 간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확산은 사회적 차별을 반영하고 이를 증폭시킬 수 있다(홍성욱 오요한 2019). 특히 외국인 주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장기체류외국인 주민이 날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25만 8,248명으로 총인구(5,169만 2,272명) 대비 비율은 4.4%에 이른다.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외국인 주민 수용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외국인 주민이 나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외국인 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서는 15.6%, ② 외국 이주민이 나와 이웃이 되는 것은 18.2%, ③ 외국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은 29.6%가 ‘안좋음’으로 응답하여 외국인 주민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2021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는 “지난 3년간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부정적(매우+다소)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12.0%, 별다른 변화 없다 57.4%, 긍정적(매우+다소)으로 변화했다 30.6%”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

2) 매일경제(2023), 첨단기술의 그림자. 일상을 파고들다 <https://www.mk.co.kr/news/it/10589042> (검색일: 2023.2.7)

조사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는 성인들이 이주민을 직장 동료, 특히 상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민과의 관계형성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한국인은 이주민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해할 준비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전체인구의 4.4%가 외국인 주민으로 다문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맞이한 이주민의 유입상황은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민족 간 갈등과 혐오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플랫폼이 쇼핑, 배달에서 정부시스템까지 구축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확산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에 닥칠 문제와 사전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온라인상의 갈등 요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생성형 AI 활용으로 일반대중의 담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온라인상 혐오 표현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혐오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감정(양혜우 2019: 90)이다. 한국에서는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대졸, 군필, 중산층 등이 혐오표현을 비켜갈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한국의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이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쥔 기득권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는 계급적, 경제적으로 열세이며 힘의 우위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차별을 받으며,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을 우월하

게 인식하는 반면에 사회적 약자를 열등한 타자로 인식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 이는 점이다.

캐롤린 엠케는 혐오사회에서 타자를 배제하는 이념의 바탕에 동질성, 본연성, 순수성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동일자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고 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타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을 혐오적 발언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 표현(hate speech)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혐오는 막연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또 실제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또한 혐오 감정이 드러난 강력한 표현만이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 정도가 낮은 말도 충분히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혐오 표현의 해악은 소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훼손하고 손상하는 의도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혐오 표현 실태조사에 나타난 혐오 표현에 노출된 후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심리 반응’으로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자책’ 등의 반응이 드러났다. 또 일과 학업에 미친 영향으로 직장을 사직하거나,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sup>3)</sup>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현상은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회의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조숙정 2023: 10).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상 혐오 표현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이현정, 2022:536), 적의적 표현, 증오표현, 혐오 및 차별적 표현(최유숙 2021: 288)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지역 인권기구는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악을 초래하는 차별적인 특정 사회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가 다수 제안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인종적 혐오,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또는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자민족중심주

3) 국가인권위원회(2016).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의, 소수자와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으로 표현되는 ‘무관용(intolerance)’을 포함하여 혐오를 확산, 선동, 고취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였다(이현정 2022: 537).

유튜브(YouTube)는 혐오 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종, 출신, 민족, 종교, 이민, 신분, 장애, 성별, 나이, 군필 여부,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성적지향 등 일정한 특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고취하는 콘텐츠를 혐오 표현 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YouTube 고객센터).<sup>4)</sup>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타인을 향한 표현의 형태를 혐오 표현이라고 하였다(서울대인권센터 2015: 14). 또 남아프리카 방송고충처리위원회는 혐오 표현을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적지향, 나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근거한 폭력을 허용 고취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과 전쟁 선전, 인종, 민족, 성별, 종교에 근거한 해악을 끼치는 폭력 선동 등을 혐오에 포함시키고 있다(서울대인권센터 2015: 14).

한국에서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 에서 혐오 표현을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과 차별 혐오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 적의 폭력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열등한 인간으로, 차별하고 혐오해도 된다는 논리가 지배한다면 개개인은 언제든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 대상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을 바꿔가며 확장되기 때문이다.

4) YouTube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1939?hl=ko> (검색일: 2023.4.5)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 선동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증식하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혐오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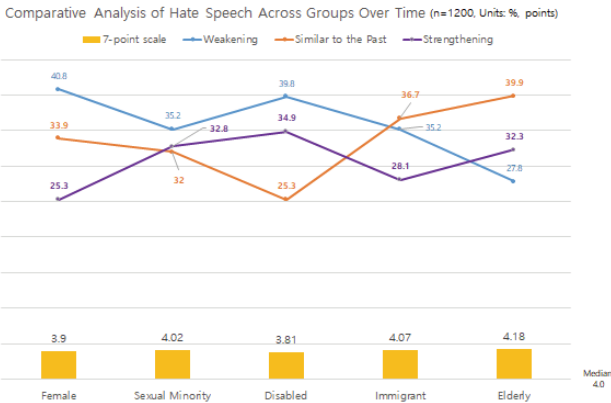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 표현 국민인식조사 (2019)에서 장애, 인종 민족, 성적지향(성소수자), 빈부(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데에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한 혐오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소수자(77.2%), 신체장애인(72.1%), 정신장애인(76.6%), 가난한 사람(71.8%)보다는 낮지만, 여성(52.0%), 노인(56.7%), 페미니스트(5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문화로 분류되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주 혐오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과거와 대비하여 대상별 혐오 표현에 있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은 <그림 1>과 같이 과거와 비교해 심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저개발국가의 여성은 삶의 대안을 찾아 선진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들은 저 의 범 노동자나 유급의 가사노동자, 은 결혼이주를 택하게

5) 경향신문(2018), “유엔, 한국인종차별심각...국가적 위기될 수도 우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12051450001>(검색일: 2023.4.5)

된다.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 또한 결혼이주를 통해 삶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와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매매혼을 통해 이주하였다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내 여성 혐오 표현 증가는 기존 남성중심 가부장제 질서가 무너지고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변화를 담고 있으며(김수아 2015),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변화 시기에 온라인상에서 여성, 소수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로서 다중적인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지보다 부정적인 시지가 더 많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타인이나 집단, 특정 이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퍼져나간다(홍주현 나은경 2016: 149). SNS를 비한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와 조의 혐오 표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온라인상의 혐오도 외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건의 본질보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혐오만 남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한희정(2016)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혐오 양상



을 하게 제시하고 있다. DAUM 아고라를 통해 스트를 수집하여 담론분석을 한 결과, 이주여성을 매 , 국제결혼 사기사건으로 혐오를 표출하였다.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간주하여 증오감을 드러내며, 국가주의를 근거로 분노감정을 정당화하는 등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문제점 전반을 결혼이주여성에게 두고 있다. 또 양혜 (2022)은 NA ER 분석을 통해 여성은 이기적이며 열등하다는 인식기반의 혐오, 여성은 이라는 인식기반 혐오,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비하 관련 혐오 등의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성별, 인종, 국적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를 너 ‘차별’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특히 여성과 이주민 등은 어느 국가에서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한국은 주로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결혼이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시아 여성과 서구 여성은 서로 다르게 계급화 되었다. 그들은 T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화, 더화, 계급화 되어 들이고 단속해야 할 혐오의 대상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추구해야 할 선망의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있다(한희정 2016: 48). 이처럼 한국에 유입한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여성, 이주민, 빈 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 까지 혐오 표현의 양상과 원인, 해결방안 등이 다 각도로 논의되었고, 미디어와 관련한 혐오 표현 양상 또한 준히 제시되었다(최유숙 2021: 293). 혐오 표현의 대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는 언론(이현호 정석호 2022: 110)으로, 한국 미디어에서 나타난 혐오 표현의 대상은 여성, 이주민과 외국인, 성 소수자, 장애인,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중이 직접적으로 경 하는 혐오 표현은 지역과 노인혐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숙 2021: 294). 또한 혐오 표현을 경 한 장소에 대한 조사에서 오프라인은 방송매체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상 혐오 표현 경 장소는 스 기사와

(71.0%), 개인 영방송(53.5%), 온라인 게시판(47.3%) 순으로 나타나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혐오 표현 경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5).<sup>6)</sup>

인터넷상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은 오프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다르게 익명성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오랫동안 온라인 공간에 남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이정년 2016: 37). 여기에는 비난, 비하, 하가 오갈 수 있는 비방성도 내포되어 있다(한성일, 2009). 또한 가족관계 안에 구축된 인종적 위계에 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저항하고 폭로하며 인정을 요구하자 다문화주의 실론, 다문화 폐지론이 등장하며 국가주의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혐오가 빠르게 트게 되었다(양혜우 2019: 111).

최근 누리 들이 사용하는 차별표현은 기존 표현보다 대상에 대한 비하와 차별 혐오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많으며, 언론이 피해자를 어 게 명명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비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홍주현 나온경 2016). 인터넷상의 소통공간이 혐오 문화를 확산시키는 채널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에 신뢰성을 수 있는 면이라고 본다.

한기 (2017: 20)은 외국인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스 기사 을 토대로 혐오 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스트 을 분석, 혐오 표현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 인지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차별적 표현과 혐오적 표현이 강력범죄와 관련되어 보다 더 혐오적인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황경아(2017)도 미디어 담론분석을 통해 반다문화 정서와 외국인 혐오 현상을 사회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디어 가 사회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프레 을 만들게 되면 사회 현실이 지니는 의미를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상 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도 있다(김정현 2001: 35 75)는 점을

6) 국가인권위원회(2021.5).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

보여준다.

강진구(2014) 또한 사이 공간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비판을 하고, 이것이 학문적 영역으로 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과 양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산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문제를 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절차마련이 시급(이정남 2016: 53)하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생산되고 확산하는 경로는 온라인 SNS나 영상의 이다(윤하나 김상호 2018). 특히 모바일 기기와 SNS가 대중화되면서 혐오 표현이 더욱 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홍주현 나온경 2016).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연 인 등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이 게재되었다면 요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혐오 발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온라인 혐오 표현이 위 한 것은, 혐오 표현의 가장 큰 특 이 표적 집단에 대한 ‘일반화’이기 때문이다(차경미 2020).

### 3. 연구방법

본 논문은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갈등과 혐오적 시각의 배경과 원인을 관련 온라인 신문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카인 (BI KINDS)<sup>8)</sup>에 자료를 제공하는 전국 11개 일간지<sup>9)</sup>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기사 색 기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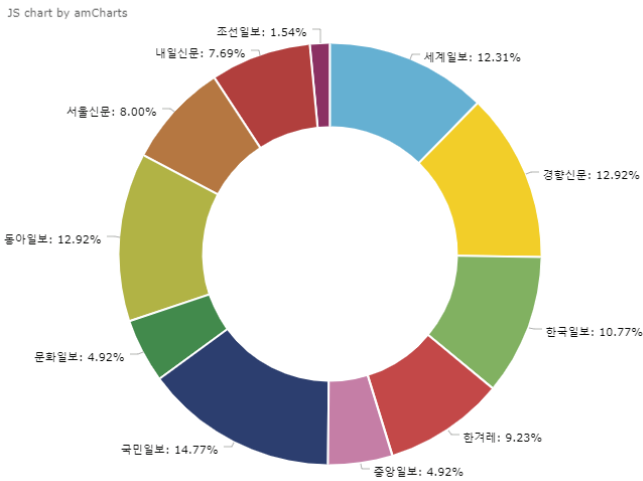
7) 출처: KISO저널 제24호 기획 동향,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8) 한국언론재단에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뉴스 속 키워드 관계망, 주요 이슈, 정보원, 이슈 트렌드 분석 정보 제공.

9) 11개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요 이슈가 발생한 2019년 이전부터의 동향을 피고, 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여부 정도를 보기 위하여 2018년 4월 1일 2023년 3월 31일까지 최근 5년으로 하였다. 색대상은 ‘스’로 지정하고 색어 범위는 ‘제목+본문’으로 하였다. 색어 처리는 바이그램으로 하였다. 색어 ‘다문화, 혐오, 차별,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 R 혐오 R 차별 R 동남아 R 결혼 R 이주 R 여성) AND (“다문화”)’에 대한 스 색 결과 325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색과정에서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정치영역에서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북한, 국회, 정당, 선거, 와대’ 등은 제외하였다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영역도 본 연구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325개 기사의 키워드 분석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추출하여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도록 추가 처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정, 폭력’은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정’과 같이 음처리를 하였다.



유사어 처리를 통해, ‘빈 , 가난, 빈 층’은 ‘빈 ’으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단일용어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 관련 혐오와 차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 들은 제외하였다. 를 들어, 각 국가 명, 한국남성,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다문화, 사람, 한국사람 등의 어 는 빈도수가 상위 10위권에 들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이 어 들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관련 기사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어 일 ,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혐오 표현과 관련성이 적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또한 색된 기사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이주노동자’, ‘난민’에 관한 기사 또한 본 논문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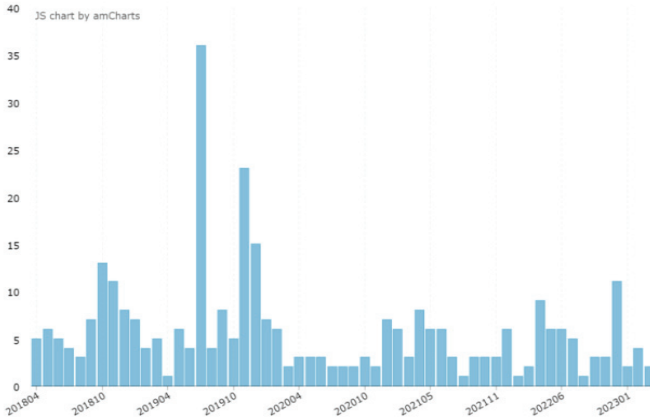
#### 4. 분석결과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을 연구하기 위해, 카인 에 기사를 제공하는 11개의 전국일간지를 분석하였다. 201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두 325개의 기사를 색하였다.


325건의 기사를 연간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8건(24%),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7건

(36%),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6건(11%),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1건(13%),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2건(16%)의 기사가 게재되어 연평균 65건, 월평균 5.4건의 기사가 실다.

기사가 많이 실린 시기를 보면, 325건의 기사를 정리한 <그림 3>과 같다. 2019년 7월이 36건의 기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19년 11월, 12월이 23건, 15건, 2018년 10월, 11월에 13건, 11건, 2022년 12월이 11건 순이다.



많은 기사가 게재된 해당 월의 이 를 보면, 가장 많은 기사가 게재된 2019년 7월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폭행 사건 발생, 다음으로 2019년 11월에는 정부부처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sup>10)</sup> 12월에는 11월 이 와 관련하여 사례를 동반한 기사와 결혼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 홍보, 2018년 10월과 11월에는 특별한 사회적 이 없이 다문화 관련 행사와 홍보 기사, 2018년 12월에는 한국과 트 남 수교 30년 관련 기사와 다문화 관련 홍보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인 사건 사고와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는 많은 기사가 양산되었지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방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62375>(검색일: 2023.5.24.)

만, 특별한 이 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사업 관련 홍보성 기사가 게재되었다<표 3 참조>.


325건의 기사를 키워드 분석한 결과 26,673개의 키워드가 분석되었다. 이 중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각 국가 명 및 한국 남성 등 일반적인 키워드는 제외하고 혐오 표현과 관련 있는 어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위 50개의 어 는 <그림 4>와 같다. 키워드는 정책, 인권, 범죄, 일자리, 미디어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정책 관련 키워드는 체류(236회), 지원(226회), 교 (172회), 귀화(129회), 한국어(127회), 정책(94회), 국적(89회), 비자(81회), 제도(80회), 무 차(73회), 상담(70회), 양 (69회), 정착(65회), 도움(64회), 강화(58회), 노력(58회) 등으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와 관련한 것이다. 기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 중 체류, 귀화, 국적, 비자, 지원 등의 키워드는 가정폭력, 성폭력, 다문화가정의 사건 사고 기사와 같은 부정적 기사와 동반하여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사건 사고 기사는 심각한 폭행 은 인사건 등을 다루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주여성으로 나누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져보는 등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다문화가정의 실상을 보고 다문화 가정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은 폭력이 만연하다는 인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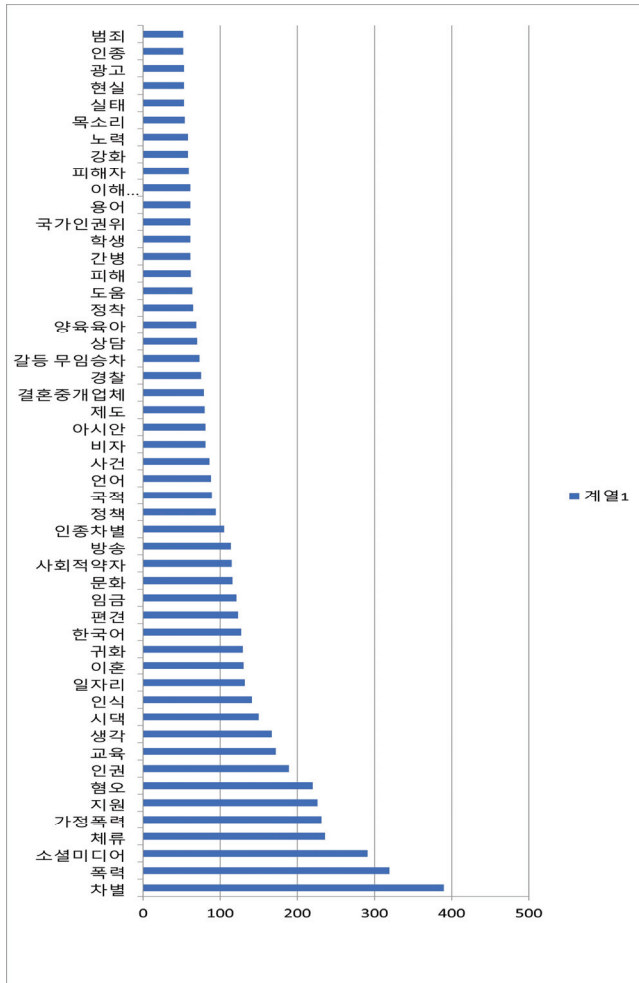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귀화’를 하지 않고, ‘귀화 후 이혼’을 한다는 점도 여 불만하다. 결혼이주여성이 귀화한 후에 이혼하는 행위는 많은 오해를 고 있다. 가정 폭력이 심각하여 이혼할 상황 예도 불구하고 귀화 후에 이혼하는 것은 결혼 이주의 목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거나 한국 체류를 위해서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결혼 이민비자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이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점이 체류 불안정을 조장한다(Redian, 2019)<sup>11)</sup>는 주장 등을 종합할 때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 여성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국의 국제결혼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단기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을 거 확인하는 것은 어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체류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적용이 없다면 오히려 국제결혼이 외국여성의 합법적인 한국 유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국적문제와 연관되어 기사화되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원인을 한국인 배우자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 지 의심하게 한다. 나아가 외국인

11) Redian(2019), 결혼이주여성의 삶, 편견과 인권침해에 불안, <http://www.redian.org/archive/138761> (검색일: 2024.3.20)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자질까지 문제 제 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폭력을 조장한다는 기사와 그런 이주여성을 본 적이 있다는 경 답을 남긴 을 볼 때 결혼이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대해 회의적일 수 에 없다고 본다.



또한 무차, 상담, 교, 한국어, 도움, 강화 등의 키워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기사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로 유입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평가이다. 그들이 한국사회를 위해 한 일이 없음에도 국민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료 서비스와 교 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원정책이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는 인식과 이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귀화와 체류비자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한국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고 있어서 한국인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과 관련한 키워드는 차별(390회), 혐오(220회), 인권(189회), 생각(167회), 인식(141회), 편견(123회), 사회적 약자(115회), 인종차별(105회), 아시안(81회), 국가인권위(61), 다문화 이해(61회), 인종(52회) 등이다. 사회적 차별과 가정폭력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며 인권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주민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sup>12)</sup>에서도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에 그으며, 결혼이주민 인권침해와 차별은 20.3%로 경제적 빈층과 장애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8). 그러나 인권과 다문화 이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혐오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나친 인권교 강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가 되었지만, 인식은 이전에 물려 있는 것이 문제로 인권교은 유아기 때부터 의무화해야 한다고

12) 한국리서치(2022), “여론속의 여론: 이주민과 함께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09-3호)”

강조하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교 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국민일보 2021.11.22).<sup>13)</sup> 이는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부족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가정폭력과 폭행 등의 원인을 인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에 대한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또한 한국은 외국인 유입이 적었고 외국인과 접촉이 오래되지 않아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의식이 부족하며, 한국인들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인권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국제결혼중개업 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고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성적으로 상 화하거나 인종적으로 비하 차별하고 있다. 기존 현수막을 통해 국제결혼 고를 해 오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선주민 여성에 대한 혐오도 드러나고 있다.<sup>14)</sup> 한국남성이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않고 외국인 여성을 찾는 이유를 한국여성이 출산을 거부하거나 남성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강조한 이면에는 한국인에 대한 비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혐오를 는 것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은 외국인의 유입이 적었고 외국인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인권 존중 의식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인은 인권교 이 필요하지만, 인권교 을 시키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주민이 유입국의 국민과 제도, 정책 등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히 선진 다문화국가라 일 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 다. 물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당연하다는 것은

13) 국민일보(2021), ““귀화해도 조선족?” 마지막 관문 ‘편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91590&code=61121111&cp=nv> (검색일: 2024.3.20)

14) 일다(2020), “현수막에서 유튜브브로, 여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 [https://www.ildaro.com/8870\(검색일: 2024.3.20\)](https://www.ildaro.com/8870(검색일: 2024.3.20))

아니다. 이주민의 삶이 본국에서의 삶처럼 인권적으로 존중받고 편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한국인의 인권 의식 부족과 다문화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유입국 국민에게 귀하는 것으로 상당히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이 한국인에게는 이주민 유입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며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이어지게 된다.

범죄 관련 키워드는 폭력(319회), 가정폭력(231회), 시 (150회), 이혼(130회), 사건(86회), 경 (75회), 피해(62회), 피해자(59회), 범죄(52회) 등이다. 다문화가정 대상 스는 대부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보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 다문화가정 대상 가정폭력 신고, 다문화가정 실상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폭력 방 교 등 다문화가정 은 결혼이주여성과 가정폭력이 세트처 제시된 기사가 상당하였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하였지만 2020년 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관한 기사와 가정폭력 방과 연구 및 조사실태 등을 기사화하여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노출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일반 국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신문기사와 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흔히 나온다면 다문화가정은 가정폭력이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존분투기, 가정폭력 당한 이주여성 사,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sup>15)</sup>등 자극적인 제목과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제목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의 함과 다문화가정은 가정폭력이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15) 단디뉴스(2023), 가정폭력 당한 이주여성 ‘뇌사’.. “폭력 고리 끊어야” <https://www.dand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3> (검색일: 2024.3.20)

특히 2019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은 비인간적이고 인한 면도 있었지만, 이후에 나온 기사에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하기 위해 폭력을 조장한 것이라고 전해지는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기사가 양립하였다. 이혼 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일부러 폭력을 조장하는 등은 한국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가정폭력이 정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태도 또한 용인될 수 없다. 한국 남편 또한 가정폭력을 일 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는 다문화가족을 소적으로 바라볼 수 에 없도록 하는 언행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으로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약하고,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불완전 그리고 이혼 시 본국으로 아가거나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모르는 남녀의 성급한 결혼에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상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기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민이나 호에 앞서 비판이 앞서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가정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한국인, 한국사회 등을 비판하기에 앞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스스로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 수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고 폭력을 일 고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과 제도, 인식개선 교 등에 앞서 일반 국민들이 다문화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어 다. 국민은 가정폭력의 진위여부에 앞서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해 폭력을 조장하고 일 는 비도 적인 집단으로 인 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132회), (121회), 갈등(73회), 간병(61회)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주부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보다 계약직 일자

리가 많으며,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결혼이주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마치 결혼이주여성만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인터뷰에 응한 결혼이주여성 또한 한국인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인조차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울 실정이다. 2000년 초반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찾기 시작하면서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으로 유입되자마자 취약계층이 되었다. 이런 경우 결혼이주 여성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본국에서 직장이나 사회활동 경험 없이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유입된 여성들이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쉽지 않다. 본인의 능력과 학력 본국에서의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은 한국에서도 취업과 적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공장이나 식당에서 취직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부류와 한국어 능력은 일정부분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미약하여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부류로 나뉜다.

후자는 정부가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인 통번역, 이중언어강사 등으로 실제 업무 수행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지원을 위해 지원으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을 접으면 없어지는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한국에서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노인 일자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외에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와 임금 차별 등을 주장하며 세력화하여 이화하고 정쟁을 만드는 행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다.

실제로 가족센터 내 결혼이주여성 차별 피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게재된 기사에는<sup>17)</sup>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

16) 한국일보(2020), “[늘:세계의 빈곤] 출발선부터 취약계층인 다문화가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01586089822>(검색일: 2024.3.20)

17) 한국일보(2022), “한국인 직원은 쓰는 육아휴직, 나는...정부센터 내 이주여성 차별 갑질 심각”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520550003877?t=20220429082100> (검색일: 2023.5.29.)

별과 질 피해를 진정하였으며, 그 결과 “내국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진정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고 하고 있다. 즉 직무에 따른 이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이주민단체 등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주여성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겨, 이러한 기사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291회), 방송(114회), 결혼중개업체(79회), 고(53회), 목소리(54회) 등 방송과 미디어 관련 키워드도 높은 비중을 보인다. 소셜미디어는 291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생활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한국인 배우자보다 어린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 나이 많은 한국인 배우자가 인터넷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반면에, 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장하여 여론을 만들어가는 행위는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2019년 당시 사회적 이 가 되었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건은 소셜미디어에 노출 으로 인해 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이 영상이 이혼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결혼이주여성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이 영상이 의도된 것인지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 진위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중은 이러한 진실게 에 에너지 소모를 원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도보다 부정적인 호감도가 상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다문화가족의 혼인 형태도 비판받게 되었다. 이

미 한국의 다문화가정 형성의 결혼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연결된 혼인은 매매혼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지원조례가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폐지를 토하라고 언급하였다. 관련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매매혼 문제와 인권문제를 고 있는 관련 조례 폐지를 빠르게 진행할 정도로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초기 현수막 고에서 어나 인터넷 고를 통해 결혼과 외국인 여성 모두를 상 화 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방송’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은 EBS ‘다문화고부열전’과 같이 다문화가정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것이 주를 이 다. KBS ‘이웃집 스’의 경우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심의 일과 사 을 다루고 있는 것과 초점이 다르다. 방




송을 통해 보여지는 다문화가정은 갈등이 중심에 있어서 시 자들 역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중심에는 갈등이 자리 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될 수 있다.

디지털시대 온라인을 통한 정보는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AI가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오 소스를 통해 AI는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기사와 이미지가 많을수록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 이라는 매개체 없이 형성된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위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수록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한 편견과 혐오적인 시선은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시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양상을 정책, 인권, 범죄, 일자리, 미디어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오해가 갈등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요소와 민간기관에서 진행되는 사회공 적인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이 보인다. 언론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한 스에서 그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보는 오해에서 비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은 0 5세 다문화 아동 보 료지원,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지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 주거지원, 맞 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 지 지원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 다문화 북학생 토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 서비스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직업교 련, 다누리 센터 등을 영하고 있다. 이외 각종 지원사업들은 민간단체들이 사회공 활동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의 정책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어려 경제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이 유입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적인 정비 및 사회 서비스가 구비될 수 에 없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소득수준 등과 무관하게 이들을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 향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즉 소득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일부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인식하거나 일반 국민과 대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우선 보호한다는 분명한 시지가 요구된다. 어느 국가든 이주민이 자국민과 동등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의 배우자이고 한국자녀의 어 니라는 요소를 감안하여, 한국가정의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장결혼이 발각될 경우나 한국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접근한 이민자에게는 이민비자나 영주권 국적부여 등에 있어 추방조치 은 , 구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느 하게 대응한다면 한국사회의 질서가 들 것

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국민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와 차별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이민정책 전체 의도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자국민이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재는 디지털이 지배적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해 인공지능이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하는 시대이다. 온라인상에 생성되는 기사와  
 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무질서와 관용 사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혼란해진다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유입도 어둠의 길이다. 전 세계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고 혼인과 출산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위기상황에 있는 한국입장에서 결혼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의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이민정책에 적신호가 켜 질 것이다.

## 5.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면서 인종 간 편견과 혐오 등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상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양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각을 가진 기사를 카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카인에 기사를 제공하는 전국 11개 일간지를 통해 325개의 기사를 수집하여, 키워드를 통해 혐오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키워드는 정책, 인권, 범죄, 일자리, 미디어 관련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갈등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올바르게 화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자국민들을 역차별한다는 인식,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한국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한국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과와 다문화이해교과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다문화 인권교과가 실시되고 있지만, 다문화 인권교과 의 대상과 교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분석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원인을 자국민의 인권인식 부족이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며 자국민을 문제시하는 한 내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에게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서 이주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혼을 위하여 폭력을 조장하거나 한국의 법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이주자들을 쉽게 용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를 통한 악의적인 정보공유로 인하여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과 제도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의 법을 악용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자리 등 경제활동에서 이주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실을 무시하고까지 이주자들만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주민들이 한국의 고용에 대한 실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주에 대한 설명과 근로형태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생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변화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있다. 사회의 변화와 인식 및 제도의 준비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여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우선하고 소수자인 이주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엄격하여야 하며, 이주민이 한국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자국민인 한국인들 또한 이주민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Online Hate Patter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igital Age

Jo, suk-jeong · Cho, il-yoon  
(Dong-A University)

투고일 2024. 02. 28 / 심사일 2024. 03. 17 / 게재확정일 2024. 03. 21